

혁명에 관한 이야기 - 5

영국의 시민혁명 ‘ 명예혁명 ’

글. 김인겸 역사문화 칼럼니스트

왜 ‘ 명예 ’ 혁명인가

명예혁명은 1688년에 오렌지의 윌리엄이 영국으로 침입하자 영국 국왕 제임스 2세가 프랑스로 도망치고 윌리엄 3세와 메리가 즉위한 사건을 가리킨다. 관점에 따라 쿠데타로 볼 수도 있고 왕조의 교체로 파악할 수 있으나, 피를 흘리지 않고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되는 시대를 맞이했다는 점에서 ‘ 명예 ’ 혁명이라 부른다. 영국의 시민혁명을 1688년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온전한 모습을 이해하기 어렵다. 프랑스 대혁명과 미국의 독립혁명은 그 사건 자체에만 집중해도 시민혁명의 면모를 웬만큼 볼 수 있는 것과는 대조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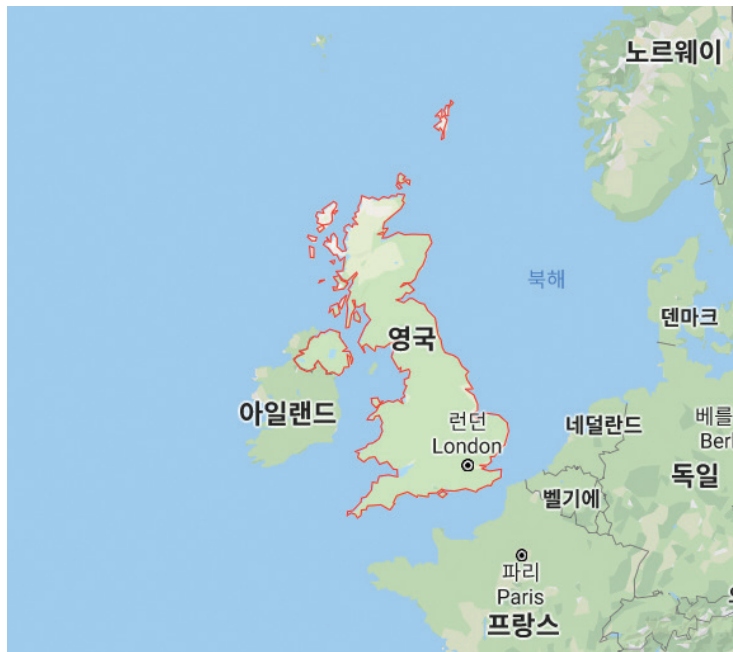
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도 1688년 전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에만 매몰되기보다 1215년 마그나카르타(대헌장)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시민혁명에 이르는 동안의 주요 사건들의 상관성과 인과관계를 거시적으로 훑어보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물론 13세기의 사건이 17세기의 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고려시대 원 간섭기의 사건을 조선시대 숙종 때의 환국정치와 직접 연결하는 게 억지인 것과 같다. 무엇보다 중세인의 사고방식과 근세 이후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본질적으로 다른 부분이 많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할 때는 ‘ 시대 보정 ’이 무척 중요하다. 이 점을 미리 밝히며 본론으로 들어간다.

국왕과 봉건귀족의 관계

현대적 의미의 시민의 자유와 권리 관념이 봉건사회에 있었을 리는 없다. 인류역사에서 인간의 존엄성 사상에 기반한 보편적 인권 개념은 적어도 20세기 이후에 나왔고, 아직도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 있다. 그렇다고 보편적 인권 사상이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도 아니다. 각 시대에는 헤게모니를 두고 투쟁한 주된 계급 혹은 세력이 있다. 과거에는 헤게모니 쟁탈에 참여한 세력은 전체 인구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대다수 서민은 지배계층의 권력 쟁탈전과 무관하게, 아니면 그 싸움에 원치 않게 휘말려 수탈당하고 희생되기 일쑤였다. 그러니 최소한 시민혁명 이전 시대에 나오는 자유나 권리, 평등 등은 지배계층에나 해당하는 사항이었고 대다수의 피지배계층에게는 의무



윌리엄 3세 초상화



영국의 지정학적 위치

만 있을 뿐이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피지배계층의 삶이 노예와 같이 아무런 자유가 보장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제한된 자유와 권리를 누린다고 하더라도 현대적 시민의 자유와 권리 개념이 없던 시대였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1215년의 대헌장은 국왕과 봉건귀족의 관계에서 귀족이 국왕에게 일방적으로 밀리지는 않았다는 의지의 천명 정도로 좁게 해석하는 게 맞다. 영국인들은 자신들의 민주주의 역사가 요구함을 대헌장까지 거슬러 확대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결과론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 식으로 보자면 고구려의 연개소문이 국왕을 제쳐놓고 절대 권력을 휘두른 것이나 고려의 최 씨 무신정권이 국왕을 허수아비로 만들어놓고 권력을 장악한 일을 민주주의의 발전으로 엉뚱하게 비약하여 해석하는 일도 가능해진다.

다만 영국이 프랑스에 비해 비교적 일찍 시민혁명이란 일컫는 명예혁명을 할 수 있었던 요인은 다른 방향에서 찾아야 한다. 영국인이 프랑스인보다 원래 더 민주적이어서, 시민권에 대한 자각이 원래 더 깊은 것은 아니다. 그것보다는 섬나라라는 영국의 지정학적 위치와 영국이라는 섬의 지형에서 비롯된 다양한 요인을 살펴봐야 한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야 비행기는 전쟁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전력이 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에 비행선 등이 동원되긴 했으나 공군이 전세를 뒤바꿀 수 있는 주요 전력은 아니었다. 섬나라 영국에서 외세의 침입을 막기 위해 중요한 전력은 오랫동안 해군이였다. 따라서 영국 국왕이 국방을 이유로 지나치게 많은 육군을 보유하기는 쉽지 않았다. 프랑스 국왕이 절대왕정 시대에 상비군을 늘리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세금을 징수하며 정치적·경제적 권력을 강화했던 것만큼 영국 국왕이 그렇게 하기는 힘들었다.

다른 한편으로 프랑스 쪽에서 본 영국, 북유럽 쪽에서 본 브리튼 섬은 나름 탐나는 땅이었다. 만약 브리튼 섬의 남쪽이 북쪽 스코틀랜드처럼 산악지형이었다면 유럽대륙에서 브리튼 섬으로의 침략은 상대적으로 적었을 것이다. 고대 로마부터 앵글로족과 색슨족, 바이킹족, 노르만디 공 기욤(윌리엄) 등 유럽의 강자들은 브리튼 섬을 밟고 이를 지배했다. 이는 영국의 만성적인 내전 상태를 초래했다. 16세기 이후 튜더 시대부터는 외국 세력의 영국 침입은 사실상 없어졌으나 유럽대륙의 왕가와 영국 왕족, 귀족과의 복잡한 관계로 인해 영국의 만성적 내전 상태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결과적으로 상대적으로 덜 강력한 왕권과 상대적으로 강한 귀족 세력이라는 영국 특유의 정치 지형에서 왕과 귀족은 헤게모니를 둘러싸고 오랫동안 투쟁했으며 이는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로도 치환 가능하다. 이 관점에서 영국 정치사를 봐야 현대적 민주주의를 시대착오적으로 적용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고 영국 시민혁명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영국의 의회 전통과 왕권 강화

영국사를 살피다 보면 온갖 의회가 등장한다. 물론 현대 민주주의와는 무관한 당시 귀족의 회의체로 보는 게 맞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화백회의, 도평의사사 등 지배층의 회의기구가 많이 등장한다. 역시 이를 현대 민주주의와 연관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예컨대 ‘선량의회’, ‘무자비의회’ 같은 중세 영국에서 열렸던 의회는 귀족이 다른 귀족을 탄핵하거나 국왕이 전쟁을 일으킬 때 세금을 거두기 위한 무대였다. 의회가 국민을 대표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튜더 왕가를 개창한 헨리 7세의 초상화
(좌)와 튜더 왕가의 문양

관념이 들어서기 이전이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영국은 섬나라지만 브리튼 섬에 고립된 나라가 아니었다. 영국의 왕족과 귀족은 혼인과 이주 등으로 유럽 대륙의 왕족, 귀족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특히 봉건시대에는 영주 개념 때문에 영국 왕이나 귀족의 영지가 브리튼 섬이 아닌 유럽 대륙에 있는 경우도 많았다. 프랑스와의 백년전쟁을 끝으로 영국 왕은 프랑스 지역에서의 영지를 상실하고, 이는 역설적으로 국민국가로서의 영국이라는 정체성이 발전하는 계기가 된다. 이는 프랑스에서도 비슷하다. 내부적으로 잉글랜드는 오랜 시간 동안 웨일즈, 스코틀랜드, 아일랜드를 통합한다. 이 과정에서 복잡하게 얽혀 있던 영국의 왕족과 귀족 등 지배층은 조금씩 정리가 되어 훗날 명예혁명의 자리를 예비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튜더 왕가의 역사적 의의를 살펴보자. 일단 튜더 왕가의 시작이 백년전쟁과 장미전쟁의 끝이라는 점에서 상징적이다. 두 전쟁은 각각 영국이라는 정체성을 강화하고 귀족끼리의 전쟁을 어느 정도 종식한 전쟁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튜더 왕가 시절은 영국사에서 절대왕정의 시기로 불린다.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 시민혁명으로 가는 과정에서 절대왕정이 나타난다. 이를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자. 먼저 절대왕정은 강화된 왕권으로 귀족들을 어느 정도 정리하는 효과를 가진다. 그러나 지나치게 강화된 왕권은 그 자체의 폐해를 드러내어 견제와 균형에 대한 욕구를 가중하기

도 한다. 이때 반작용의 주체 역시 표면적으로는 귀족이다. 이 지점에서 시민혁명의 양상이 달라진다. 영국의 명예혁명은 프랑스 대혁명에 비해 부르주아 계층의 활약이 두드러지지 않았다. 프랑스 대혁명에서 국왕과 귀족, 성직자는 모두 구체제라는 이름 속에 간혀 청산의 대상이 되는 데 반해, 영국에서는 적어도 겉으로는 국왕인 제임스 2세만 도망치고 귀족들이 다른 왕을 추대하는 형식을 택했다.

명예혁명은 시민혁명인가

1649년부터 1660년까지 잉글랜드는 왕이 없는 공화국이었다. 왕당파와 의회파의 내란 와중에 찰스 1세는 처형되었고, 올리버 크롬웰이 호국경이자 국가원수에 올라 영국을 다스렸다. 그러나 크롬웰의 집권을 시민혁명으로 보는 시각은 거의 없다. 크롬웰 정권이 다스린 12년은 교조적 칼뱅주의와 엄숙주의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독재적 군사정권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크롬웰이 죽고 찰스 2세는 아무런 조건 없이 복위되었다. 그러나 찰스 2세는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그의 뒤를 이은 제임스 2세는 폭탄을 두 개 가지고 있었다. 하나는 그가 가톨릭교도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가 왕권신수설 신봉자였다



올리버 크롬웰 초상화

는 것이다! 제임스 2세는 즉위 직후부터 사사건건 의회와 대립했다. 당시 의회의 두 파인 토리와 휘그는 제임스 2세에 대항하여 연합을 맺었다. 제임스 2세와 의회의 대립은 격화되어 의회는 왕을 몰아내기로 결정하여 네덜란드에 있던 메리와 윌리엄과 동맹을 맺는다. 메리는 왕위계승서열 1위이고(제임스 2세의 아들이 태어나면 밀려남) 그녀의 남편인 윌리엄은 3위이다. 윌리엄과 메리는 군대를 이끌고 영국에 상륙하였고 제임스 2세는 제대로 반격하지 못하고 아내가 있는 프랑스로 건너가 버린다. 공동왕으로 즉위한 윌리엄과 메리는 1689년 의회가 제출한 권리장전에 서명하여 명예혁명은 완성된다. 권리장전을 계기로 영국은 전제군주제에서 입헌군주제의 길로 나아가며, 이는 근대적 시민국가의 기반을 닦았다는 점에서 시민혁명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명예혁명을 전제군주의 출현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한 귀족연합정치의 완성으로 볼 여지도 있다. 시간이 흐르며 과학기술의 발전과 산업혁명의 시대가 되어 자본가들이 성장하며 귀족연합은 약화하였지만, 당시 명예혁명의 주체는 전제왕권을 허락하지 않고 자신들의 정치권력을 안정화하여 기득권으로 하려는 의도가 더 강했다고도 해석 가능하다. 이렇게 본다면 좀 혹독하게 말해 명예혁명은 귀족과두정치를 성립시킨 사건에 불과하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명예혁명과 뒤이은 권리장전은 영국의 정치를 안정화해 이후 영국이 세계 최강대국으로 발돋움하는 바탕을 이루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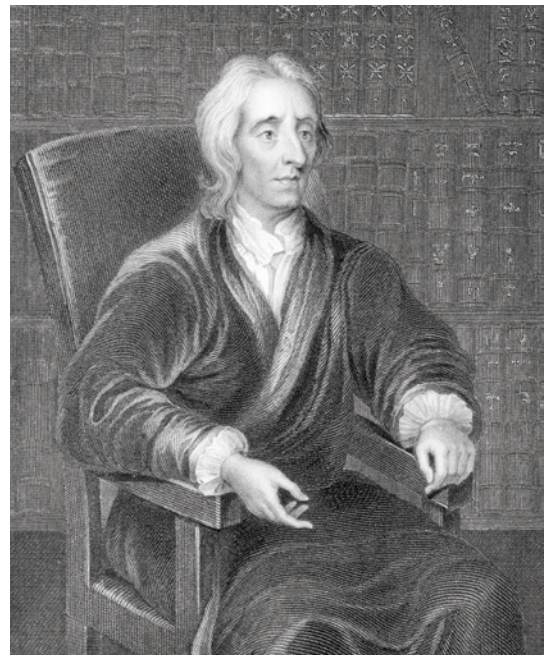
사상가 2명을 소개하며 글을 마치고 싶다. 시대의 전환기에는 대 사상가도 출현하는 경우가 많다. 시대와 인물은 상호작용하며 변화하기 때문이다.

토머스 홉스는 1651년 『리바이어던』을 출간한다. 홉스는 군주주권론 자체는 부정하지 않았으나 군주의 주권은 인민이 주권을 양도한 결과라는 사회계약설을 주창하였다. 이로써 오랜 세월 국왕들이 신봉한 왕권신수설은 논파되기 시작하였다.

또 한 사람의 사회계약론자인 존 로크는 1690년에 발표한 『시민정부론』의 두 번째 권에서 천부인권론과 시민이 위탁한 주권을 정부가 시민의 의지와 어긋나게 사용하면 주권을 도로 거두어들일 수 있다는 저항



토머스 홉스 초상화



존 로크 초상화

권을 주장하였다. 프랑스의 장 자크 루소 또한 자신만의 사회계약론을 내놓는데, 사회계약론자 3명이 영국과 프랑스에서 나왔다는 사실은 단순한 우연은 아닌 듯하다. 코로나 19라는 미증유의 사태에 코로나 이후에는 어떤 시대정신이 필요할까? 시대의 사상가를 기다린다. ☞

그림 출처
위키피디아, 구글 지도